

[발제 1]

대통령과 공약

정연정 교수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 목 차

1. 대통령 공약의 허와 실
2. 역대 대통령 공약이행
3.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문제점
4. 대통령 공약 실�효화 방안

1. 대통령 공약의 허와 실

○ 대통령 공약의 의미

-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한사람의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음.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권의 선택이자, 정부에 대한 선택임
-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주요한 평가기준은 국정수행 능력, 이른바 국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도덕적, 철학적 기초와 정치행정적 능력임. 대통령은 따라서 이러한 자질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자기증명의 테마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공약이 되는 것임
- 지난 반세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간접선거로 치러진 7번의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자체가 없었고, 직접 선거이후 나머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와 소속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정권의 유지와 획득에만 매몰됨. 따라서 실현성이 없거나, 때로는 실현의지조차 없는 내용을 내세워 이른바 공약 남발이 이루어지는 것임.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방치하거나 급전환시키는 무책임한 관행을 거듭해오고 있음
- 다양한 국민계층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결집시켜야 하는 후보와 정당은 하나의 정책공약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국민계층으로부터 동시에 우호적인 해석과 지지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공약을 구성하고 발표함

○ 대통령 공약의 특성

- 대선 정책공약은 정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 즉 정당 정책의 일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그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 이른바 정부정책은 아니지만, 정권담당과 정부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 정책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의제 그리고 차기 정권의 주요한 정책의제임
- 그리고 선거에 승리한 후보의 공약은 거의 자동적으로 정부의 공식의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대선 정책공약은 정책발안과 채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른 정책의제와는 구별되는 것임
- 또한 당선한 후보의 정책공약중 전략적인 중점공약은 바로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정책공약은 곧 정부정책이 됨
- 대선정책공약체계를 구성하면, 이 체계는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운영능력과 정권담당준비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근거가 됨. 또한 대선 정책 공약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원천을 조성하는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정권 및 정부의 이념적 소신이며,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일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선 공약을 이해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 갖는 공적 명분과 의미를 사장시키는 것임

2.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

- 미국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은 대체로 집권후 66-70%정도 이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체로 대통령들의 공약들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다음 정권으로 이양되어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노태우 정부 이후 공약파기 사례는 매우 많다. 예를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막판에 임기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중간평가를 약속했으나, 당선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비밀 합의를 통해 중간평가를 무산시킴.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선때 쌀 개방 불가 공약을 했으나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로 쌀개방을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당시 내각제 추진을 약속했으나 집권후 이를 철회한 바 있음
-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선거 당시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공약했음을 밝히면서 공약자체의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 따라서 공약의 진정성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와서 더욱더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 역대 정부의 경제 공약 이행도(6공화국~참여정부) : 일반정책



◆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

-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나 물가상승률을 2~3%로 유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은 실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제수지는 1988년 이

후 적자를 기록했고, 1991년에는 적자폭이 87억달러에 이르렀음. 물가는 6공화국 평균 7.8%로 상승했음

-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에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제외하거나, 1991년에 실시하기로 한 금융실명제 약속을 폐기하는 등 경제민주화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확장억제와 전문화 촉진’ 공약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동서고속전철 건설 등 지역감정 타파 공약은 3당 합당 등의 영향으로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문민 정부(김영삼 대통령)

- ‘깨끗한 정부, 강력한 정부’ 공약은 각종 비자금 사건, 측근의 구속, 한보사태,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 등으로 전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실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소통령의 전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실인사가 넘쳤고, 학연·지연·가신인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
- 보수적 노선과 진보적 노선간의 혼선, 전략적 기조와 정책간의 혼선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의 이행도 저조한 편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쌀수입 개방 절대 불가’ 공약은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로 지켜지지 못했음. ‘흑자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외환위기 여파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해 1996년에 237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이행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됨

◆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 당선의 결정적 계기가 된 DJP연대의 고리인 내각제 개헌 약속이 집권후에 완전히 폐기되었음. 경제분야에서는 외환위기 체제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세계 5강진입 공약을 내걸었으나, 빈 공약으로 끝났음
- 복지예산 30% 증액 공약도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김대중 후보의 단골 선심성 공약의 하나였던 농가부채 탕감도 지켜지지 못했고, 지방행정계층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실천되지 못했음

◆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집권후 추진되었으나, 현재 위헌판결로 원점화되었음. 또한 경제분야에서 7% 신성장 달성 공약과 25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시대 공약은 실천되지 못했음

○ 역대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도

: 강원도 SOC 사례를 중심으로

-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분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역대 대통령의 SOC형 공약은 실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역대 대통령의 SOC형 공약 이행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분야	김영삼대통령	이 행 여 부	김대중 대통령	이 행 여 부	노무현 대통령	이 행 여 부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	중앙고속도로 조기완공	○	동해고속도로 연장	△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	철원-고성간 통일관광로 개설	×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	△
			양구-인제-정선-태백간 고속도로 건설	×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
			기존고속도로 확장 및 구간 연장	×		
국도 및 지방도	강릉-고성국도 4차선화, 고성까지 연장	△	포항-동해-강릉-고성간 해안순환도로 확충	×		
	홍천-양양 4차선화	△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노선개량	△		
	제천-영월-동해간 4차선화	△				
	삼척-울진 4차선화	△				

철도	동서고속전철 건설	×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	경춘선 중앙선철도 조기 복선화	△
			금강산선 경원 선 복구	×	원주-강릉철도 복 선화	×
			원주-강릉철도 건설	×	춘천-속초, 포항-고 성철도 조기착공	×
			구절-횡계간 광 광철도 건설	×	동해선 및 동해북 부선 철도 조기착 공	×
			도 순 환 철 도 망 구축	×	경원, 금강산 철도 개설추진	△
			경춘선 복선전 철화	×		
공항	영동국제공항 건설	×	양양 국제공항 건설추진	×		
			강릉공항 현대 화 및 국제노선 개설	×		
			일본-원주, 일본 -강릉간 국제항 공 노선 개설	×		
			지 방 공 항 유 치 및 정비	×		
항만			동해항만 시설 확충	×		
			속초 신항만 건 설	×		
			동해항 주문진 항 확충	×		
			관광전용항개발	×		
			삼척유람선 휴 양항 건설	×		
			동해-삼척의 활 동해권 물류기 지화	×		

3.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공약과 문제점

- 대표적인 민생공약으로 경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반(반값 등록금), 국가 책임 영유아 보육 실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육성,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12만호 공급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생을 회복을 약속함
- 하지만, 최근 경실련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공약은 대체로 D-F수준에 머물러 있고 평균 점수는 D점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조)

공약	이행 내용	평가
7%성장, 300만개일자리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목표치40%)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 2000명(목표치 22%)	D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참여정부 대비 총 사교육비 규모 증가(목표치의 0%)	F
국가책임 영유아 보.교육실시	.보육지원확대는 일부 실행했으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은 미흡	C
중소기업, 자영업자 육성	.일부 세제지원들의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은 미흡	D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통신비 일부 인하등을 제외하면 주요 생활비 항목의 인하는 없었음	F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 9871호(목표치의 76%)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평균 2008-2009년 2년간 평균 2만1078호(목표치의 17.6%)	C
민생 공약 평균		D

※ 출처: 경실련 MB정부 민생공약 평가 보고서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의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가폭등, 원자재비 상승등으로 인한 수출 진작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7% 경제성장률은 임기내에 달성하기 어렵고, 최근 정부내에서도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 오히려 수월형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사교육비가 참여 정부에 비해 2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일부 세제 지원혜택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일부 주택공급차원에서 추진이 진척을 보이고 있음. 서민경제의 내실화 보다는 단순 건설경기에 부응하는 정책만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민생공약은 대체로 핵심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3년 기간동안 실제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급격한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기업들에게 가격인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방편형 조치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생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핵심 공약 역시 그 추진이 잘못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형편임

○ 이명박 대통령 지역 공약과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착수되거나 진행중인 사례가 많지 않음.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공약이 백지화됨으로써, 여타 지역의 주요 지역 공약들의 폐기 우려가 도출되고 있음

지역	주요 공약 내용
경기도	<p>경기동남부 새로운 발전 전기(여주 내륙항구건설)</p> <p>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첨단기업, 외투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p> <p>경기북구지역경제 활력(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화, 재정지원 강화)</p> <p>주한미군 반환환공여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p> <p>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축소</p> <p>남북한 군사분계선 주변 평화구역 설정(문화예술체육구역, 자연탐방구역 설치)</p> <p>평택, 당진일원에 황해자유구역 지정하여 대중국수출전진기지로 활용</p> <p>수도권 도로와 철도시설 확충 및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시스템 구축</p>
남해안	<p>한반도 선벨트(목포-부산 남해안) 구상</p> <p>남중권(순천, 여수, 광양, 남해, 사천, 하동)을 하나의 광역 네트워크 시티로(광양만 경제자유특구를 경제자유지역으로 확대지정, 규제완화, 금융세계 혜택받는 특별 지위-6대 중점산업, 5대 대기업 본사 유치)</p> <p>부산권(경부운하와 항구의 유기적 연결, 동남권 신공항 건설등)</p> <p>목포권(J 프로젝트, F1경기장, 여수 EXPO 지원)</p> <p>한반도 선벨트 종합개발계획(특별법 제정)</p> <p>항만물류산업, 관광휴양, 해상 KTX(부산-목포), 서남신국제공항</p>

전북	<p>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 프로젝트(간척지내 복합산업단지, 첨단농업단지 조성, 새만금운하조성, 만경강전통벚길 복원)</p> <p>교통망정비(새만금-무주고속도로, 김제공항 건설)</p> <p>군산, 새만금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p> <p>국제해양관광레저기지 조성(신시, 무녀, 선유도등)</p> <p>식품산업 클러스트(친환경농업대학 및 연구소 시험장건립등)</p> <p>전주광역시권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센터 구축(신재생에너지진흥원, 그린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등)</p> <p>무주 스포츠 공원, 진안 한방산업단지, 장수 고산지청정농업특화추진</p>
경남	<p>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육성(마산-창원-진해 광역교통망확충)</p> <p>밀양남지내륙 항구</p> <p>동남권 신공한 건설</p> <p>경남지역산업클러스터화(거제도-조선, 사천-항공우주)</p> <p>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여계 관광벨트 구축</p>
광주.전남	<p>호남운하 건설통한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 및 광주내륙항구건설</p> <p>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p> <p>호남고속전철 2년 조기개통</p> <p>광주 광집적지 R&D 거점 육성</p> <p>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p> <p>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p> <p>2012 여수 세계박람회 총력 유치</p> <p>J 프로젝트발전(동북아 최대 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 레저 스포츠, 월드빌리지 신설, F1경기장 건설지원)</p> <p>나주공동혁신도시 조기활성화 및 에너지 산업클러스트 구축 지원</p> <p>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 활성화 지원</p>
충북	<p>충부내항, 한반도 대운하 종합컨트롤 타워, 복합물류단지 건설</p> <p>의료복합단지 구축</p> <p>광역교통만 건설(충청고속도로,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청주-천안 전철화,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p> <p>중원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관광 인프라 확충)</p>

대전.충남	<p>금강운하조성 및 대전과 행복도시 내륙 항구</p> <p>금강주변 내항 산업단지 구축</p> <p>국제과학기업도시 건설</p> <p>행정중심복합도시 차질없는 지원</p> <p>대덕 R&D 특구발전대전권광역교통망 구축(행복도시-대전청사-대덕 벨리-청주 공항 연결교통망, 충청선 산업철도, 서해안 물류철도 조기건설)</p> <p>당진,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진입도로, 공용부두 신출 지원</p> <p>충남도청 이전 지원</p>
강원	<p>세계적 동계 스포츠 메카로 육성 및 동계 올림픽 재도전 지원</p> <p>교통인프라 확충(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동해선 철도구축(포항-강릉-저진), 경춘북선전철 조기완공, 제2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국도 개통,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p> <p>춘천-화천-양구-인제-호수종합 관광벨트 조성</p> <p>건강, 생태, 모험레포츠 단지신설(한강, 홍천강 주변)</p> <p>동해안 에너지 벨트조성(원유저장시설건설, 유조선 정박 기반시설 조성, 북한과 러시아 연결 송유관 설치)</p> <p>세계적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의료+농업+바이오 산업)</p> <p>획기적 치수산업</p> <p>DMZ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통일특구 조성</p> <p>동아시아 제일의 관광 휴양중심지역 육성(설악-금강 통일특구 지정)</p> <p>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 사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p> <p>강원, 경북, 울산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적극 지원</p>
제주	<p>실질적 특별자치도 완성</p> <p>국제자유도시화(법인세 대폭 인하, 면제지역 대폭 확대, 국내선 항공료 인하, 제2국제공항 조기건설, 차이나타운과 웹빙관광센터 조성)</p> <p>고유농수축산업 보호 육성(감귤소득직불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유통기반 시설 확충 등)</p>
인천	<p>나들섬(한강, 임진강 하구)조성</p> <p>인천자유구역활성화</p> <p>14년 아시아게임 지원</p> <p>09년 세계도시 엑스포 지원</p> <p>경인운하 조속히 건설</p>

경북	구미, 상주, 문경 내륙 항구 건설 교통확충(동서5.6축, 남북7축, 고속도로 조기완공, 중앙선복선전철화, 경주-포항 KTX 노선신설, 울진, 예천, 대구공항 경비행기 도입) 유교, 디지털, 가야문화권 등 테마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 원자력 테크노 폴리스 건설, 신 재생에너지 연구소 설립등) 경북북부지역 천연가스 배관망 설치(상주, 문경, 안동, 영주, 예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낙동강 프로젝트 지원
울산	울산신산업단지 4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울산 신항 배후고속도로, 울산시 순환고속도로 건설 청정생태도시 지원
부산	강서지역에 운하거점 신도시 건설(그린벨트 3천만평 해제) 경부 운하를 통한 강변 여과수 대량 취수로 부산에 1급수 원수 공급 관광과 컨벤션산업육성 (제2백스코 건설, 해운대, 영도, 송도 관광벨트화) 2020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 재개발 외곽순환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 낙동강 교량 추가 건설 동남권 신공항 건설

- 동남권 신공항 관련 공약은 부산은 물론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대전, 충남의 공약으로 제시된바 있음. 이 두가지 사업의 경우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의 규모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약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 포항과 경북지역, 경기 수도권, 호남지역에는 부분적인 산업 클러스터 형을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 관광과 컨벤션

단지로, 경북과 포함지역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광주, 호남지역의 경우는 광집적지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개별 지역에서 약속된 공약이 현재 대체로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역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에 국한하여 사활을 걸게 되는 됨. 공약단계에서 약속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싼 이해충돌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역공약은 후보시절에도 이미 여러 가지 평가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된바 있음. 따라서 지역별 주요 공약들이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주요한 국정사업들에 대해 전지역이 매달리는 형국으로 변형된 것이고, 공약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

4. 대통령 공약 실효화 방안

○ 대통령 지역 공약 관리 협의회

- 대통령 지역 공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관련 공약 제안 및 실효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지역 개발 관련 공약 조정을 임기직후 조정하기 위한 제도



적인 장치 마련 필요

- 특히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실효성있는 예산 확보방안과 더불어 공개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공약자료집 수준만으로는 공약의 구속력이 실행 가능성을 가늠기 어려움
-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이나 집행에 필요한 계획들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 이때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권역별로 배분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재한 상

황.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부문별(복지, 환경, 경제, 교육분야등) 공약 평가 및 이행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관련 공약 이행 평가 자료나 근거가 부족한 현실

- 지역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임기동안의 공약 집행 및 이행의 진척률이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구체적인 형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활동으로 수행할 수 도 있지만, 지역의 개별 정당의 지역당의 연합 TF를 통해 관련 공약 이행 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의 조정 기능 강화

-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인한 이해충돌, 이해관계의 대립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지역 공약 실행을 위한 협의 절차를 보다 공식화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광역자치단체장과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불가피한 조정이 발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상호 조정토록 하는 자율적 과정의 생성이 무엇보다 중요함